

민주,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처리 촉구... “국민 명령 따라야”

이재명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특검 찬성...반드시 하라는 뜻”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부 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사적 일들의 연속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많지 않다. 반드시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여전히 의사 일정 합의가 안됐다”며 “제가 국회의원을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따른 특검법,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슬픔으로 기억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21대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채 해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 통과된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길 바란다”며 “특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건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다. 총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말고 무슨 수가 있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윤 정정당당하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모든 화살표는 윤 대통령과 최측근을 가리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고백하고 하나하나 실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

검법은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첫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지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특검을 통해 수사 외압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전남도의회, 정부·국회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건의

청소년 인구 적용하면 14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



전남도의회 박현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어 사회적 고립 청소년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14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경우 은둔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다”며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4명 중 1명은 10대 때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령기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대체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추경 99% 삭감

강진군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과 본 예산을 반토막낸데 이어 올해 첫 추경예산안도 99% 삭감해 시끌시끌하다. 일각에서 일부 의원의 의정과 의회사무과를 길들이기 위한 문자 예산심의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0.26%에 해당하는 2억75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5억84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5억75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 예산은 0.5% 삭감한 반면,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체 9억7000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삭감조서에 삭감 이유 한 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당시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저격 삭감이라는 의심을 산 적이 있었다. 논란이 일어난 예산심의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노두섭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표결 결과 4대 4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방자한 횡포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삭감돼 의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